

2002년을 돌아보며...

‘이공계 기피’ 대학원 미달사태

과학문화진흥 논의 불 붙여



2002년은 ‘과학문화’의 진흥 문제가 사회 전방위에서 논의됐던 한 해였다. 과학문화진흥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한 것은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 이공계 대학원 미달사태 등 과학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건들이 줄지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연초 청소년의 이공계 대학 지원율이 26.9%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이공계 지원율은 최근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더욱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대학원 입시의 미달사태이다. 몇 해 전까지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대의 석·박사과정이 거의 50%에 가까운 미달률을 나타냈다. 서울대의 대학원이 이러한 지경이니 다른 사립대나 지방대의 대학원 교육은 거의 황폐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와 대학원 미달사태의 배경에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인 푸대접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깔려 있다. 힘들여 학위를 하고도 과학기술자의 초임 연봉이 금융직 등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IMF사태에서 본 것처럼 구조조정의 1차 대상이 되는 것이 한국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인 위상이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외면하고 우수한 이공계 출신들이 사범고사로 빠지는 기현상까지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이공계 기피’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위원회를 열어 과학교육의 강화, 과학기술자 처우개선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2003년 예산

에 과학문화 분야의 예산을 대폭으로 늘려 과학문화진흥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문화진흥책은 과학경시 등 한국사회 의식구조에 뿌리를 둔 것이니 만치 단기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핵’ 논의 과학기술 배제

심층적인 대책 세워야

2002년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표면화되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한 해였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했던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강경주 북한 외교부 부장이 ‘핵 개발’을 시인하면서 비롯됐다. 미측은 북한의 핵개발은 지난 92년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며 KEDO(한반도에너지기구)를 통해 미측이 북한에 제공하는 연간 50만t의 중유중 12월 인도분 공급을 중지하고 북한이 핵 시설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북한 신포지역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도 중단기로 했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현재 밀고 당기는 외교전의 양상을 띄고 있지만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국제분쟁의 요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시인’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해석이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미국측이 북한 핵개발을 도운 파키스탄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확보, 북한측이 시인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북한은 파키스탄으로부터 가스원심분리기기술을 도입, 원폭 원료인 우라늄 235 농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개발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과 철수’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북한 핵 논의에서 과학기술계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서도 이번 북한 핵 문제가 기술적인 요소가 개입된만치 안보장관 회의에 과기부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핵심적인 문제에 과학기술계가 배제되는 바람에 정부의 대책이 수박겉핥기식이 되거나 낭패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북한 핵개발 문제만 해도 북한이 핵개발을 종래 플루토늄에서 우라늄 농축방식으로 전환한 이유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대책이 가능했으리라는 지적이다.

눈길 모은 대선주자 초청 포럼

지도자 과학자질 검증돼야



21세기의 첫 지도자를 뽑을 2002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계가 대선 후보를 초청해서 과학기술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주최로 지난 10월 18일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한달 뒤인 11월 18일에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초청, 과학기술 정책을 토론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과거 대선 후보들을 초청, 일방적으로 정책을 들었던 것과 달리 대선 주자와 과학기술계 각 분야의 토론자들이 과학기술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처음으로 시도된 모임이다.

그러나 이 포럼의 토론이 대통령후보의 과학기술관을 검증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소 벗어난 질문과 토론을 벌여 아쉬움을 남겼다. 대부분 과학기술계의 애로 또는 요구사항

을 전하고 후보에게는 단답형을 요구하는 수준이어서 지도자의 과학기술관을 평가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다. 이 포럼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애로사항 개진보다는 지도자의 과학기술관을 검증,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포럼은 대통령 후보들이 과학기술자와 직접 만나 과학기술을 논의했다는 점과 정치와는 거리를 두어왔던 과학기술계가 정치를 끌어들이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계도 이 포럼과 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국가와 사회에 전달해서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세계 10위의 빛과 그림자

‘인프라’ 선 여전히 하위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다.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연감 2002’는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지난해 21위에서 10단계가 오른 10위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IMD평가는 그 동안 97년 22위에서 98년 28위로 하락했고 2000년부터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20위권 밖으로 맴돌아 왔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투자는 세계 10위권, 연구개발비 증가율에서는 6위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는 특허부문이 세계 1~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국인 특허의 경우 3위, 기업연구원 1천명당 특허 건수는 1위를 마크하고 있다. 또 해외특허 취득건수와 SCI논문 증가율부문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되어 한국 과학이 국제 무대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에서 ‘인구 1천명당 연구개발 인력(21위), 인구 1천명당 기업체 연구개발 인력(20위)’ 등 인프라 부문이나 ‘의무교육 과정에서 과학기술 교육(30위), 젊은이들의 과학기술 관심도(22위)’ 등 과학문화 부문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10위 평가’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⑤

姜信龜 (한서대 교수)